

수도권 집중 심각한데...또 멈춰선 '혁신도시 시즌2'

지난해 공공기관 이전 시작 약속 1년 이상 지나도 밀그림 못그려 46% 서울 등 수도권 몰려...광주·전남 18곳으로 전국서 가장 적은 정부 들어 사실상 손 놔...지역소멸 막을 대안 조속 추진 목소리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사실상 연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며 대응 전략을 수립중이던 광주·전남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얻어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주축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으며, 광주·전남이 빛가람혁신도시를 공동조성하며 지역 혁신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고품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활력 상실, 좋은 대학·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 등 지방 소멸 위기 속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339곳 중 서울 122곳 등 수도권에 46% 몰려=전체 339개 공공기관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곳(36%)으로 압도적이며, 경기도가 27개, 인천이 8개다. 이어 대전에 26곳, 세종 25곳, 부산 21곳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전남이 16곳, 광주는 2곳에 불과해 대전·세종·충남(57개), 부산·울산·경남(42개), 대구·경북(24곳) 등에 비해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에 가까운 충남권, 이미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따라서 광주·전남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고,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의 출자·산하기관도 연계 이전할 수 있는 질적(수직적) 범위 확대,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기관 및 공적

유관단체 등도 이전기관에 포함하는 양적(수평적)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적극성 떨어지며 이전 밀그림도 못그려=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우등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전 일정이 1년 이상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밀그림조차 그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 이전 '로드맵'도 만들지 못했는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수협 중앙회 등 5대 분야 61개 기관을 유치가능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 같은 갈등·마찰은 표면적인 것으로, 실상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하고자 하고 정부부처, 서울 등 수도권 등도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는 등 정부의 적극성 미흡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기본, 대학·민간기업까지 이전시켜야=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본이며, 대학·민간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 전경.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늦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업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이전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멀고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인재, 자본, 기업 등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용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전남 이전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윈-윈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연구원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은 이 자리에서 '2차 수도권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며,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력"임을 강조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애꿎은 호남고속철 예산을 왜?

한동훈 "호남 버리겠다는 민주당" 전남도 증액요구 650억 반영 안돼 여야 내년 예산 미반영 책임 공방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애꿎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예산 반영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의 '예산 살바 싸움' 속에 "호남 차별의 상징인 호남고속철도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별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다"며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호남고속철도를 거론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호남고속철도 예산이 삭감 내지는 미반영될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수 십년 동안 예산 반영에 애를 먹었던 광주·전남 지역민으로서 '놀라운 뉴스'일 수밖에 없다.

통상 국회 예산 심의는 정부안을 놓고 증액과 감액, 신규반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현재 민주당

당은 정부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년 예산 중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국비는 134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안에 포함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다.

다만, 전남도가 요구한 '내년 예산 증액분'이 민주당 단독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한 대표가 지적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애초 내년도 국비 2614억원을 요청했는데 이중 1346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고,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650억원을 우선 증액한 뒤 2025년에 나머지 618억원을 나눠 증액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 국비 증액분 65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예산 삭감은 아니지만 내년 국비 증액분 650억원 미반영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공사가 다소 지연될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면서 이 지사가 APEC 지원예산 증액 동의를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밝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추가 협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 예산안 합의 처리 촉구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재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항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청남도 무형유산 제6호 남포벼루 보유자 김진한 선생 및 이수자 전수생 작품전

제6회 보령남포 명연특구별전

2024. 11. 28.(목) 15:00 ~ 12. 4.(수)

광주광역시 예술인마을 / 광주미술관

주최 : 보령시

주관 : 남포벼루작가회